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인구 유출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 차원의 초광역 협력 대응체계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에서 올해 2월 2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가시티 출범의 필요에 대해 부울경 주민 86.4%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에 합의하고 그 조직·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치면서 내년 1월 1일 공식출범되어 부울경의 미래를 책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느닷없이 연합 참여 중단을 선언하였고, 지난달 이루어진 부울경 단체장 3자 비공개 회동에서는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경제동맹은 강제성 없는 낮은 수준의 행정협의체에 불과하며, 행정통합은 바로 인근지역에서도 최근에 무산되고 말았던 선례를 기억할 것이다. 행정통합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특별연합보다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함을 알기에 특별연합을 먼저 추진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곧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정부 접촉과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오랜 시간 추진해온 국가적 프로젝트를 변질시켜버린 것이다.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해체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지원이나 협력을 받아내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며,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으로 예정된 예산도 국회 예산심사에서 감액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이 감

내해야 할 몫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으로의 길도 멀어질 것이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800만 부울경 시도민과 해운대구민의 염원에 힘입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지원을 조속하게 이행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시도민의 염원과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정상화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를 적극 설득하여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 선언을 즉시 철회하고 좌초 위기에 처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재논의하라.

2022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